

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2009. 10

외 교 통 상 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 례

발간에 부쳐

I. 한·인도 CEPA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진행 및 경과
2.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인도 CEPA협정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2. 분야별 협정문 주요 내용

III. 한·인도 CEPA 활용

1. 관세인하
2. 원산지 증명
3. FTA컨설팅 및 비즈니스모델

부록

1. 인도의 관세유형별 주요 관세인하 내용

◦공산품

◦농림수산물

2. 전문가 목록

3. 원산지증명서

<발간에 부쳐>

최근에 들어와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21세기 경제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12억의 인구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인도와 경제협력 동반자가 되기 위한 일본, 중국, EU 등 세계 경제 강호들의 각축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12차례의 심도 있는 협상 끝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여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맺은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 중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추후 인접국가들과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각각 20세기 전반과 19세기 중엽에 나라를 강점당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우방입니다. 양국간 협력 관계는 한·인도 CEPA 협정을 통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한·인도간 무역장벽들이 사라져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가져오고, 우리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는데 있어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I. 한·인도 CEPA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진행 및 경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개최된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학계, 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5년 1월~8월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3차례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FTA 체결절차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한·인도 CEPA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1월 제 4차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곧이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한·인도 CEPA 협상개시를

결정하였다. 때마침 그 해 2월 방한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은 공식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2006년 3월부터 2008년 8월 까지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총 1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2006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운영 규칙(Terms of Reference)을 제정하고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 및 양허안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2006년 5월(서울)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통관행정 및 절차의 5개 분과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6월(뉴델리) 3차 협상에서는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경제협력 및 기타규범 등 총 7개 분과별 협상이 모두 시작되었다. 2007년 1월(인도 자이푸르)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양허율 및 관세철폐 일정 등) 및 네거티브 방식 투자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같은 해 4월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6차 협상을 연속 개최하여 개괄적 상품양허 초안과 서비스·투자분야 1차 개방안을 교환하고 원산지 분야 절충안도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8년 9월까지 서울과 뉴델리를 번갈아 가며 7~12차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공식협상 사이 세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가졌다. 회기간 회의는 공식협상 중간에 열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다.

2008년 9월(서울) 12차 협상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협상 전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타결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곧바로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 회의를 가졌다. 법률검토회의는 협정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 문안을 법률적으로 다듬는 작업이다.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협정문안의 조정 및 명료화가 완료됨에 따라 한·인도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종료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기로 합의하고,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에 가서명하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하원의원 선거(총선) 직전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내각 승인이 관례적으로 보류됨에 따라 2009년 4~5월 총선으로 승인이 지연되다가 한·인도 CEPA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의해 7월에서야 내각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역사적인 한·인도 CEPA 협정이 서울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의 서명으로 한·인도 CEPA 협상은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한·인도 CEPA 공식서명까지 추진 경과:.....

- 2003년 12월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계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기로 합의
- 한·인도 CEP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5년 1-8월: 3차례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 2005년 12월: 『FTA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2006년 1월: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서울)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 채택
 - 2006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년 2월 7일 압둘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은 협상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월중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 개최 합의
- 한·인도 CEPA 협상 진행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6.10.10-13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1.10-12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 2007.4.3-6 한·인도 CEPA 제 6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7.24-27 한·인도 CEPA 제 7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7.9.9-10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서울)
 - 2007.10.31-11.2 한·인도 CEPA 제 8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12.18-21 한·인도 CEPA, 제 9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8.4.2-4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뉴델리)
 - 2008.5.29-6.2 한·인도 제 10차 협상 (서울)
 - 2008.7.29-8.1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 (뉴델리)
 - 2008.9.17-18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뉴델리)
 - 2008.9.22-25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8.10.23-25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 (서울)
 - 2008.11.5-8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 (뉴델리)
- 2009.2.9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 2009년 8월 7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한·인도 CEPA를 정식서명

I.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는 거대 신흥경제 대국이다.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약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11.5억 명의 인구(세계 2위)와 함께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3조 2,883억 달러로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04~2008년 연평균 8.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도 6% 이상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1.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분	인도	한국
인구('08)	1,149백만명	49백만명
국토면적	328만km ²	9.9만km ²
수출('08)	1,319억불	4,220억불
수입('08)	2,258억불	4,353억불
외환보유액('09.5월말 기준)	2,623억불	2,268억불
명목 GDP('08)	12,097억불	9,470억불
구매력평가 기준 GDP('08)	32,883억불	13,423억불
1인당 GNI('08)	1,070불	21,530불
실질 GDP 증가율('08)	7.3%	2.2%
소비자물가 상승률('08)	8.3%	4.7%

출처 : World Bank, IMF, OECD,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인도 주요협정 내용

1974 문화협정
1974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1976 과학기술분야 협정
1985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89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협약
1992 항공협정
1996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1996 투자보장협정
2003 투자촉진협력 협정
2004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05.6월 발효)
2009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체결

한국과 인도는 지난 1973년 수교 이후 약 35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

계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양국간 교역액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약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2008년 156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하였다. 2003~2008년간 양국간 교역액 평균증가율은 약 30%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평균증가율 17.8%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도는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2009년 6월 기준 신고금액으로는 약 23억 달러, 투자금액으로는 약 1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2.대인도 교역추이

(단위:억불)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13.8	28.5	36.3	45.5	55.3	66.0	89.8	49.9
수입	12.5	12.3	18.5	23.1	36.4	46.2	65.8	23.0
무역수지	1.4	16.2	17.8	22.4	18.9	19.8	24.0	26.9
교역액	26.3	40.9	54.8	68.6	91.7	112.2	155.6	72.9

주: * 1월부터 8월까지 자료
출 처: KITA.net 무역통계

표3. 한국의 총교역 및 대인도 교역증가율 비교

(단위:천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액	253,844,672	284,418,743	325,464,848	371,489,086	422,007,328	226,366,616
증가율	31	12	14.4	14.1	13.6	-22.3
대인도증가율	27.3	26.3	20.3	19.3	36	-15.8
총수입액	224,462,687	261,238,264	309,382,632	356,845,733	435,274,737	199,669,905
증가율	25.5	16.4	18.4	15.3	22.0	-34.4
대인도증가율	50.1	14.2	72.4	27	42.3	-53.2
총교역액	478,307,359	545,657,007	634,847,480	728,334,819	857,282,065	426,036,521

주: * 1월부터 8월까지 자료
출 처: KITA.net 무역통계

표4. 한국의 대인도 투자 추이

(단위:백만불,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68-’09)
신고	금액	43.0	21.2	48.9	112.7	150.3	327.7	281.0	144.2
	건수	16	27	56	75	152	204	214	62
투자	금액	45.4	16.9	40.8	91.1	98.5	291.2	188.5	67.6
	건수	45	40	82	116	224	346	324	104

주: * 1월~6월까지 자료
출 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한·인도 CEPA체결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

도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이번 협상의 최대 의의이다. 인도는 현재 일본과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 개시전 상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에 이어 또 다른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하나 더 선점하게 되었다.

표5. 인도의 FTA 추진현황

	국 가
기 체결국가	스리랑카('00발효), 아프가니스탄('03발효), 싱가포르('05발효), 방글라데시('06발효), BIMST-EC*('06발효), SAFTA**('06발효), 칠레('07발효), MERCOSUR('09발효), 한국('09.8.7일 정식서명), ASEAN('08.8타결, '10년 발효예정)
협상 중	EU, 일본, GCC, 태국
검토 중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 * BIMST-EC :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

**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출처: 국제무역연구원(2009.1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약 0.01%, 장기적으로는 약 0.18%(약 8억불,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인도 CEPA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후생은 단기적으로 3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9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6. 한인도 C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		인도	
		단기*	장기**	단기*	장기**
GDP	증가율(%)	0.01	0.18	0.00	0.18
	금액(백만불)	36.3	778.4	-0.1	868.0
후생변화(백만불)		289.1	925.5	-56.1	519.9

주: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완전철폐, 그 이상인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인하 폭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10년까지의 관세철폐를 반영함. 한-미, 한-EU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0년이 지나도 철폐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인도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39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단기 및 장기 효과 모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한 인도 CEPA의 산업생산 효과 (단위: 백만불)

	단기		장기	
	한국	인도	한국	인도
농업	75	-10	168	181
수산업	3	-6	9	0
제조업	564	-524	1,730	-187
서비스업	981	2	2,030	153
전체	1,623	-538	3,938	148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별 수출입효과와 경우, 먼저 인도의 높은 관세율과 수입탄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관세의 철폐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1억 7,700만 달러, 수입은 연평균 3,700백 달러 증가하여 매년 약 1억 4,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부문의 수출효과가 4,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화학부문이 8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제조업종 중 수출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한 인도 CEP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불)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10년 누계	금액	증가율	10년 누계	금액	10년 누계
화학	23	5.3	233	8	4.0	75	16	158
섬유	3	2.1	29	6	1.9	55	-3	-26
철강	11	2.1	114	2	0.9	18	10	96
기계	42	6.3	419	4	5.7	37	38	382
전기전자	16	1.0	160	2	4.0	18	14	142
자동차	30	6.1	297	2	7.3	19	28	277
생활용품	2	5.9	19	1	4.7	13	1	6
기타 제조업	50	6.4	503	14	1.0	136	37	367
제조업 총계	177	3.9	1,774	37	1.6	372	140	1,401

주: 단위는 2004~06년 평균가격.

출처: 산업연구원(KIET)

서비스 부문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확보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접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부문은 거의 포함되었다. 특히,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가능성은 인도에서 우리나라 은

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9. 인도진출 외국계은행의 지점설치 현황

(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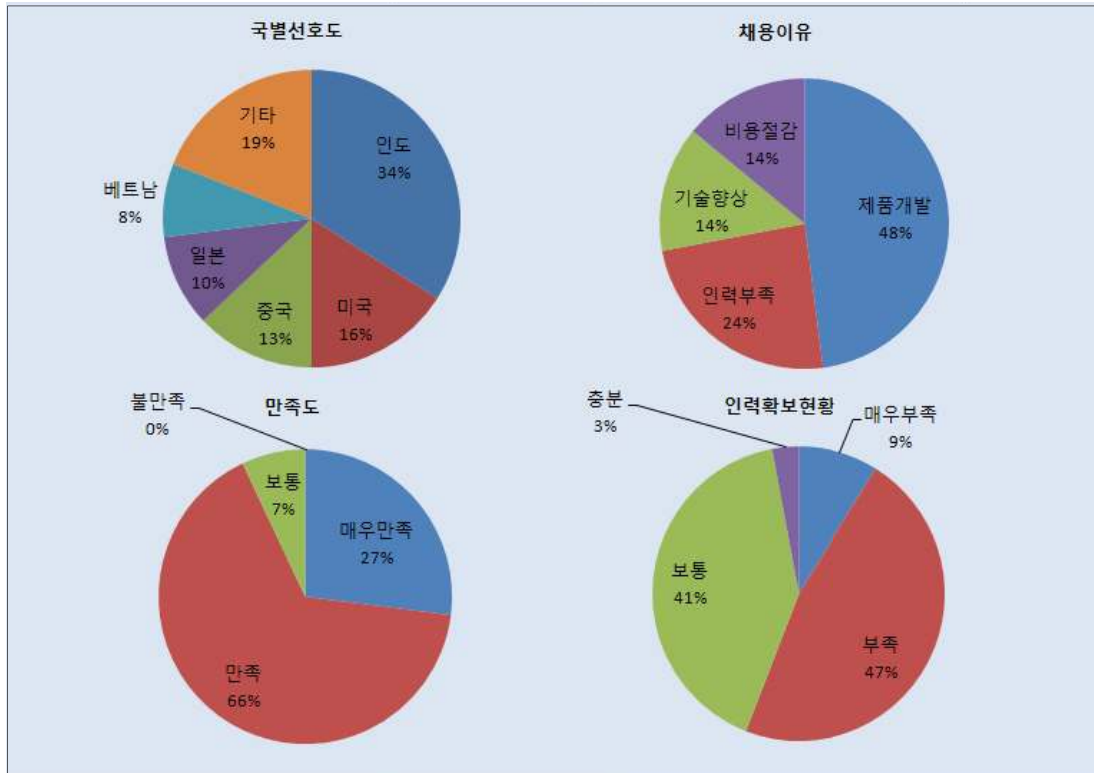
은행	지점수	은행	지점수
Standard Chartered	90	Bank of America	5
HSBC	47	Caylon Bank	5
Citibank	39	Barelays Bank	5
ABN Amro Bank	28	Bank of Tokyo Mitsubush	3
Deutsche Bank	11	신한은행	2
BNP Paribas	8	기타	25
Bank of Nova Scotia	5	전체	273

주: 2008년 3월 기준

자료: 인도중앙은행

인력이동의 양허와 관련하여 인도 독립전문가 유입이 촉진될 경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도 IT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의 국내유입 증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품개발 및 품질, 가격 경쟁력 제고 뿐 만아니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 역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IT벤처기업 연합회 소속 1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IT 벤처 및 중소기업들은 인도인전문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채용만족도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한국 중소기업의 IT전문인력 활용실태 설문



자료: IT벤처기업연합회소속 105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08년)

II. 한·인도 CEP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한·인도 CEPA 협정문은 서문과 15개장의 본문, 그리고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대한 양을 갖고 있다. 서문은 협정체결의 기본 정신과 상호 공동의 인식 등을 담고 있으며,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각 장의 부속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 투자유보 목록, 예외사항 등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문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민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부록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교환각서(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

교환각서(개성공업단지)

교환각서에 첨부된 개성공업단지 지도

4장 원산지 절차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6장 서비스무역

부속서 6-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7장 통신

8장 인력이동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9장 시청각 공동제작

10장 투자

부속서 10-가 수용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부속서 I, II(투자유보안)

11장 경쟁

12장 지적재산권

13장 양자간 협력

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2. 분야별 협정문 주요내용

서 문

한국, 인도 양국은 한·인도 CEPA 협정의 구체적인 체결에 앞서 양국의 상호 공동인식과 합의의 기본정신, 철학을 서문에 담았다. 다음은 서문의 주요 내용이다.

- 양국은 오랜 우호관계와 확고한 경제적 연계 및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인정한다.
- 경제통합을 통한 양국의 시장 확장이 양국 경제발전 가속화에 중요하다.
-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한다.
- 이 협정이 자본과 인적자원의 유인을 향상시키고 양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한다.
- 양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고자 하는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무역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한다.
- 양국은 또한 양국의 개발 목표에 적합한 경제철학을 추구하고 각자의 정책목표를 인식할 권리를 재확인한다.
- 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하면서 경제 및 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양국은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 상호간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무역통합의 혜택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결의한다.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1장에는 한·인도 CEPA의 목적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등이 기술되어 있다. 먼저 양국은 한·인도 CEPA 협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제1.1조)

한·인도 CEPA협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 증대■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 및 향상을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양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공정경쟁의 여건 증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 기반 조성■ 협정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 발굴 및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개발■ 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 구축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

이와 함께 양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다른 양자, 지역 및 다자 협정에서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시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제1.2조) 이 밖에 양국은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명시하였다.(제1.3조)

2장. 상품무역

상품무역 부문은 총 3절,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의 관세인하 및 철폐 유형과 연도별 관세인하율, 그에 따른 한국과 인도의 양허안 등 총 4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양허안은 품목별로 관세를 어느 기한 내에 철폐 또는 인하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계획안으로써 품목과 철폐 또는 인하 기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양허표) 형태로 만들어졌다.

먼저 양국은 관세를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제 2.1조)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3조 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를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또한 양국은 협정서 2장의 내용을 양국간 상품무역에 적용하며, 상호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였다.(제 2.2~2.3조) 이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자국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며, 양국 중 어느 한 쪽의 요청으로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제2.4조) 이는 향후 제3국이 우리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할 경우, 추가협상을 통해 인도측의 양허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적 원칙

양국은 또한 제3장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의 상품 수입 또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비관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합의하였다.(제2.5~2.6조) 관세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방송 및 촬영 장비, 행사 전시 및 시연상품, 외국 상품의 전시를

위한 장비 등은 일시 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도 용이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제2.11~2.12조)

무역구제 부문 중 반덤핑에 대하여 양국은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조치와 함께 반덤핑조치 종료 이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1년 동안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 불가 등 기존 WTO 반덤핑협정보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제2.14~2.19조)

*최소부과원칙(LDR: lesser duty rule)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한 해당 국가는 덤핑 마진보다 낮은 관세로도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그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제로잉(zeroing) 금지
반덤핑 마진 계산 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 높은 덤핑마진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또한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제2.20조)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은 합의를 했는데, CEPA 협정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협정상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2조)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 전 협의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하고,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 상품에 대해서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동시에 발동될 수 없게 하였다.(제2.23) 또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27조)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 등의 수입규제 조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양국은 상호 이익 및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통신장비와 전기 및 전자 장비 분야의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28조)

부속서 2-가

부속서 2-가에는 먼저 양국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표10. 양국의 단계별 양허유형

유형	관세인하 및 철폐 일정	
E-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E-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이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E-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이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RED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5% 범위내로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1일부터는 1~5% 범위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SEN	한국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인도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EXC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가 면제된 상품	

* 기준세율: 2006년 4월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

상기 합의된 양허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세인하 계획표와 함께 단계별 관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india.asp?country_idx=18) 부록1에서 관세유형별 주요 공산품 및 농산품 관세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한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율-1~5%)×12.5%	(기준세율-1~5%)×25%	(기준세율-1~5%)×37.5%	(기준세율-1~5%)×50%	(기준세율-1~5%)×62.5%	(기준세율-1~5%)×75%	(기준세율-1~5%)×87.5%	(기준세율-1~5%)×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표12.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이행 8년	이행 9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율-1~5%)×12.5%	(기준세율-1~5%)×25%	(기준세율-1~5%)×37.5%	(기준세율-1~5%)×50%	(기준세율-1~5%)×62.5%	(기준세율-1~5%)×75%	(기준세율-1~5%)×87.5%	(기준세율-1~5%)×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장. 원산지 규정

3장 원산지 규정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영역원칙의 예외 등 2개의 부속서와 영역원칙 예외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을 정리해 놓은 품목표,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 수행에 대한 교환각서,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교환각서, 각서에 첨부된 개성공업단지 지도를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다.

먼저 양국은 향후 협정이 발효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이 장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제 3.1~3.2조) 이와 관련, 원산지 상품으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의 기준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을 기술하였다.(제3.3~3.4조)

제3.4조에 기술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

-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으로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FOB 가격이란?

해당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

$$RVC = \frac{FOB\text{가격} - VNM}{FOB\text{가격}} \times 100$$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FOB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수입재료인 경우에는 상품가격, 보험, 상품인도 운임 등이 포함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이 기준

이와 함께 양국은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 연료, 에너지, 도구, 형판, 주형, 윤활제, 촉매제 등이 해당된다.(제3.5조) 양국은 또한 상품의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 유지를 위한 보존 작업, 포장의 변경, 분류, 단순 조립 및 동물의 도축 등 특정 작업 또는 공정

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인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제3.6조)

한·인도 양국은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가 상대국에서 상품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재료의 원산지는 그 재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상대국이 된다는 누적조항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며,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소위 미소조항에도 합의하였다.(제3.7~3.8조) 또한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시 쓰이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의 세번변경 여부 및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의 세번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시에는 고려대상이 된다.(제3.10~3.11조)

이밖에 양국은 관세당국의 충분한 입증이 없는 재반입 상품에 대해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영역원칙,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부속서 3-나에 두기로 합의하였다.(제3.13~3.14조)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을 부록에 명시하고 있다.(부록 3-나-1)

부속서 3-가

부속서 3-가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일반적 주해와 함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품목별 요약 내용이다.

표13.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	구분(HS 챗터)	품목별 기준
신선 농수산물	Ch. 1-14	완전 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Ch.15-24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자 동 차	Ch. 87	승용차(8703)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및 역내부가가치 40% 기준
전자기계류	Ch. 84 & 8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 40%기준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류	Ch. 29 & 39	화학제품 : 4단위 세번변경기준 플라스틱류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역내부가가치기준 40%기준
섬유 및 의류	Ch. 50-63	의류 : 2단계 생산공정기준* 섬유 :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40%

주:* 2단계 생산공정기준 : 수입산 원사(non-originating yarn)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직물을 제직한 후 의류를 재단·봉제하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의 Yarn Forward (역내산 원사사용 : 3단계 생산공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4장. 원산지 절차

4장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부터 발급, 효과 등을 포함, 기타 관련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총 18조의 협정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대한 2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한·인도 양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정부지정기관에서만 발급되며, 우리나라는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인도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1조, 부속서 4-가) 특별관세대우를 받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칙적으로 수출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제4.2~4.5조)

이밖에도 양국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수입절차에 필요한 제출 서류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해당 상품과 일치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고(제4.7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제4.10조) 또한 수입국의 사후 검증요청,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증방문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에 합의하였으며(제4.6~4.16조) 협정 발효 5년 후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업 자율발급 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여 원산지 증명 관련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17조)

부속서 4-나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함께 실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명시되어 있다.

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5장의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부문은 상호 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조치내용을 각 부문별로 총 11조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먼저 양국은 양국간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양국간 수·출입 절차의 운영에 합의하였다.(제 5.1조)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시행을 위한 원칙

-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에 대한 수요와 사회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원할화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절차는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간소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통관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게 한다.
- 당사국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개정을 채택하기 전 그 당사국 무역업계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한다.
- 절차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법규준수 노력에 집중하기 위한 위험평가원칙에 기초한다.
-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호협력·기술지원 및 우수관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해 상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긴급을 요하는 상품의 경우 24시간내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 채택·유지를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하였다.(제5.2조) 또한 양국은 고위험과 저위험 상품을 구별하여 저위험 상품의 경우 통관을 간소화하며,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함께 국내 수입자, 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수입 전에 미리 결정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제5.4조~5.8조) 아울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활용, 사전심사 등에 협력하고 이를 위해 관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제 5.6조, 제5.9~5.11조)

6장.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부문은 총 23조의 협정문과 개방할 서비스영역을 명시한(포지티브 방식) 양국의 양허표와 금융서비스 등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먼저 서비스무역을 WTO의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한 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을 포함하는 소위 모드(mode) 1~4로 정의하고* 정부조달 등을 제외하였다.(제6.1~6.2조). 이어서 양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제3국과 새로운 서비스무역 협정을 맺을 시, 이에 대해 기존 상대국이 요청하는 협의에 응하여 제3국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제6.3조) 또한 양국은 시장접근과 관련 양허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영업의 수(쿼터) 또는 서비스 산출량,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고용한 자연인의 수,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 또는 투자합계의 총액, 사업자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조치의 금지와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국민대우 의무에 합의하였다.(제6.4~6.5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자격인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자격증이 요구되는 특정 서비스분야에서 자격증이나 교육 등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발효 후 12개월 이내 시작하고 이것이 타결되도록 양국이 장려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직종 등의 명기 없이 비구속적 문안으로 합의하였다.(제6.8조) 또한 양국은 WTO GATS 및 우리나라 국내법(외환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CEPA에서의 구체적인 약속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제6.11~6.13조)

서비스무역에 대한 양허와 관련, 양국은 부속서 6-가, 6-나의 양허표를 통해 분야별로 시장 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등에 대하여 표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제6.17조), 최소 3년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차별들의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허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6.19조)

부속서 6-가/나 양국의 서비스 양허안

양국의 양허표는 분야별,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에 대한 협정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인도측은 총 11개 분야의 81개 영역,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104개 영역을 개방하였다.

표14. 인도측 서비스 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분야		주요내용
사업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회계, 건축설계, 의료 및 치과의료, 의사 서비스 등에서 국경 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허용
	R&D 서비스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농업과학 R&D 부문의 신규개방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시장 개방
	광고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및 외국인 방송채널과 활자매체를 통한 국경 간 광고서비스 제공 허용
	광업 관련 서비스 및 사진서비스	전 분야 개방
통신서비스	음성전화서비스, 데이터전송 및 무선호출 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터넷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건설서비스	건물관련 일반 공사 및 토목 엔지니어링 관련 일반 공사, 설치 및 조립 공사,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방에 합의하여 외국인 단독투자 가능	
유통서비스	소매를 제외한 위탁중개인 서비스, 도매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방
관광서비스	호텔 및 숙박서비스, 여행대행 및 관광가이드 분야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주: * 담당기관의 허가 및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PB)의 승인이 있어야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 여행 대행 및 관광가이드의 경우, 가이드 숫자는 500명을 넘길 수 없음.

표15. 한국측 서비스 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분야	주요내용
사업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와 R&D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부동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과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관광, 여행,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통신, 유통, 운송 서비스	통신(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무선데이터 서비스 등), 유통(도·소매 서비스 등), 해운(선박임대 및 예선 서비스 등), 철도운송, 항공운송(컴퓨터 예약시스템, 항공기 유지 및 수리 서비스 등) 분야의 국경 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현지주재의무를 조건으로 개방한 분야*	수의사, 지도제작, 엔지니어링, 큐리어 서비스,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에 대한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주: * 국경간공급(mode1)의 조건으로 공급대상국에 사무소 등의 설치가 요구되는 의무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동 부속서는 제6장(서비스무역)의 부속서 형태로 규정되어 제6장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등 일반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금융건전성을 위한 조치를 이번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양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치를 도입·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외국환 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불건전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외환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참고)을 할 수 있다.

신금융서비스, 즉 한쪽 당사국(한국)에는 있지만 상대국(인도)에는 없는 금융상품 혹은 금융서비스의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하며, 현행 금융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허가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항)

다음은 양국의 금융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안으로 부속서 6-가/나 중 금융서비스부문만 발췌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16. 인도의 금융 양허안

구 분	내 용
보험서비스	생명·손해·재보험 서비스에서 26%까지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은행서비스	4년간 우리나라 은행 지점설치를 10개 까지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 (favorable consideration)할 것에 합의*
기타금융서비스	금융리스 관련, 법인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 자산관리 부문은 26%까지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증권발행 서비스 부문은 74%까지, 은행은 51%까지 외국인 지분취득이 가능

주: *인도는 매년 20개의 외국은행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쿼터제를 운용

표17. 한국의 금융 양허안

구 분	내 용
보험서비스	외국 생명·손해·재보험회사만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은행서비스	국내 진출해 있는 법인이나 지점형태의 금융서비스 공급의 경우 일부 제한조치* 등을 제외하고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주: *보험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 주택청약저축 등의 취급기관 제한 등 국내법상 규제

7장. 통신

통신 부문은 공중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사용,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행위 등 총 3절 14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절은 총 4개의 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망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신서비스 자유화와 관련된 사항은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다루었다.

양국은 먼저 양허표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전송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상호 보장하였으며(제7.3조), 지배적사업자*가 상대국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자신 및 자회사, 계열회사 등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며, 상호약정에 따라 상호접속* 제공을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제7.4~7.7조)

*지배적 사업자인가?

필수통신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통화의 KT나 이동통신의 SKT 등이 해당

*상호접속이란?

공공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연결을 통하여 서로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간에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상호접속 관문교환기, 접속회선 등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

8장. 인력이동

인력이동 부문은 일반원칙,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분쟁해결, 유보조항 등 총 8조의 협정문과 양국이 상호 개방하는 전문가 목록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먼저 인력이동은 상품무역(2장), 서비스무역(6장), 투자(10장)와 관련한 자연인의 이동(Mode4)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구직자와 국적이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이민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제8.1조) 이와 함께 양국은 자연인의 이동이 허용되는 대상자의 범위와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관련 일시입국 허가기간 등을 명시하였다.(제8.3조)

표18. 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구분

구 분		내 용
투자자와 연계된 인력이동	기업내 전근자 (ICT: Intra Corporate Transferees)	임원(executive), 고위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상용 방문자 (BV: Business Visitor)	상업적 주재 설립자 (투자자) 등 서비스판매자(SS: Services Seller)
투자자와 연계없이, 서비스공급을 위한 인력이동	전문인력 (Professional)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 개인 사업자 ☞ CEPA에서 최초양허

표19.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정의 및 요건, 일시입국 허용기간

구 분	내 용
기업내전근자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급자, 법인, 투자자 또는 상대국 영역에 지점·자회사 또는 제휴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인 자이면서, ■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접 1년 이상 고용된 자
상용방문자 (B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판매 또는 서비스 판매 계약 체결을 위해 상대국에 입국하는 서비스 판매자 ■ 일반 공중에 대해 직접적인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자 ■ 기업내전근자(관리자, 임원, 전문가)로서 투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투자자의 피고용인인 자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자연인으로서, ■ 취업을 위해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요하는 전문 분야에서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를 취득하고(한국 또는 인도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석·박사를 포함), ■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 분야에서는 그 분야 종사를 위해 당사국의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등록·허가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

구 분		체류기간	
		대한민국	인도
기업내전근자 (ICT)	임 원	2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고위관리자		
	전문가		
상용방문자 (BV)	상업적 주재 설립자 (투자자) 등	90일/ 연장 가능	180일/ 연장 가능
	서비스판매자		
전문인력 (Professional)	계약서비스공급자(CSS) /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1년 이내 계약기간 / 연장 가능	
	독립전문가 (IP) / 개인 사업자		

양국은 이밖에 동 협정의 대상자 중 장기체류자(기업내 전근자,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양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관련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 일시입국 및 취업을 허용하며(제8.4조), 일시입국 거부에 대한 분쟁은 상대국의 국내 행정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14장 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제8.7조)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부속서 8-가에는 양국이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한 전문가(계약서비스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구체적인 직종 8개 분야 총 163개가 규정되어 있다.(부록 2 참조)

9장. 시청각 공동제작

시청각 공동제작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제작사들이 제작비와 제작업무를 분담하여 시청각물을 제작하여 그 권리를 공동제작자가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서, 한·인도 CEPA에서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체결근거를 규정하였다.(제9.1조) 또한 양국은 공동제작 협정의 범위에 우리가 기체결한 FTA 사상 최초로 극장,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 비디오디스크, 디지털장비(CD, DVD, VOD, 휴대폰 등) 또는 그 밖의 형식에 의하여 배급되는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도박 제외)·영상효과 및 애니메이션 등 포괄적 시청각물까지 포함시켰다.(제9.2조)

향후 체결될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국내제작물로 인정받아,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쿼터 제한 등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9.3조)

10장. 투자

투자 부문은 4절 22조의 협정문과 3개의 부속서 및 유보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먼저 투자의 전 과정, 즉 설립 전 투자(설립, 인수) 및 설립 후 투자(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처분 등)에 대하여 상대국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 및 투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인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정부 역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제10.3조)

양국은 또한 상대국 투자자들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일정비율 국산부품 사용 및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우선 구매, 수입량을 수출량 또는 투자액에 연계, 수출량 또는 외환가득액과의 연계를 통한 자국내 판매 제한, 기술이전, 특정한 시장에 독점공급, 특정 국적의 고위경영진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등과 같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였다.(제10.5~10.6조)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제3국과 투자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해 기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상대국에게 제3국에게 제공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도 양국은 합의하였다.(제10.9조)

이밖에 양국은 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10조) 또한 양국 정부는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0.12조)

분쟁해결과 관련, 양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하며, 만약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 ICSID 추가절차 규칙,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요청할 수 있으며, ISD 제기 최소 90일 전에 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제10.21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1966년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 간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직접 분쟁의 중재가 아닌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143개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공

부속서 10-가 수용

부속서 10-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상과 함께 허용되는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에 대해 규정하며, 특히 간접수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명시하였다. CEPA에서는 정부의 조치 또는 그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직접수용
국가가 투자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간접수용
통상 정부 조치가 투자를 물리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자산에 대한 경영, 사용, 통제의 효과적 상실 또는 가치의 중대한 박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부속서 I, II 투자 유보안

부속서 I, II는 양국의 유보목록을 담고 있으며 유보 분야, 유보 내용 및 유보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투자 유보안을 작성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40개(현재유보 11개, 미래유보 29개), 인도는 총 42개(현재유보 20개, 미래유보 22개) 유보안에 합의하였다.

아래는 양국 유보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협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하여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표20. 우리나라의 유보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농축산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보리 재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외국인은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종사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미만 소유 허용
에너지 부분 (전력,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의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및 인수기지와 고압배관망의 운영 관련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 ■ 한국전력공사(40%), 한국가스공사(30%)에 대한 총 외국인지분취득을 규제
공공질서, 안보상의 이유를 위한 투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의 채택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 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 이행요건의 부과 등이 가능 ■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등의 민감한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 확보
문화·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 상영, 판촉, 홍보 및 후반제작 서비스에 관한 규제 가능 ■ 영화제작에 특혜를 주는 공동제작 약정의 자유로운 채택 권한을 확보 ■ 신문의 발행 관련 규제 권한의 미래 유보 ■ 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 역시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 의한 발행이 금지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주운, 연안운송, 국제해상여객운송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권한 확보 및 대한민국 선박의 취득 관련 통제 가능 ■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 의한 국적기 소유를 금지, 항공 주권 확보

표21. 인도측 유보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초재배, 원예, 종자재배, 축산업, 양어, 수산양식 채소, 버섯재배 및 농업, 그리고 그 연관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농업 및 모든 농업활동에 대한 규제권한의 미래유보 ■ 소,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및 버새, 혼합농업(경작과 낙농업)을 포함한 낙농업에 관한 규제권한의 미래유보 ■ 임업, 재목 벌채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의 미래유보 ■ 어업, 어류 부화장, 양식장 및 어업 부수 사업에 대한 규제권한 미래 유보 ■ 자원 및 인구 대국인 인도의 특성상 제한적 개방에 그침.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탄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과 관련 서비스, 비철금속 광업에 대해서는 투자 가능 ■ 다이아몬드와 귀금속(금, 은)채굴, 석탄 광업(전력프로젝트, 철과 강철, 시멘트 생산 및 석탄광(국유화)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철광석·금속 광석·비금속 광물·철광석 채굴(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인정 ■ 석유정제분야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49%까지 지분 취득 가능하고, 민간 기업의 자동항로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되나, 인도정부에 의해 공고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정책에 따라야 함.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관련 투자 허용 ■ 음식료품,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유리 등 비금속 광물제품, 철강 등 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기계,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 관련 투자 허용

	■ 인도는 제조업의 전분야에 걸쳐서 개방함.
--	--------------------------

11장. 경쟁

경쟁 부문은 총 5조의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간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경쟁법의 정의, 이와 관련한 협의 및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의 경쟁법과 경쟁당국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제11.2조), 경쟁과 관련한 분쟁은 CEP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제11.5조)

한국의 경쟁법과 경쟁당국

- 한국의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8. 2.29. 법률 제8863호) 및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 이후 동 법률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한국의 경쟁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다.

인도의 경쟁법과 경쟁당국

- 인도는 경쟁법(2002) 및 이 협정의 발효 이후 동 법률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인도의 경쟁당국은 ‘인도경쟁위원회’ 및 ‘경쟁상소법원’ 이다.

12장.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문은 총 6개의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른 상대국 국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양국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도에서의 우리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자국내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제12.2조), 특허절차 간소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지적재산권 인증 및 재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 선행기술의 공동조사 및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관하여 협력하며(제12.5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CEP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제12.6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된 이 협정은 원래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는 달리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여를 하고 있다.

13장. 양자간 협력

양자간 협력 부문은 총14조의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및 수동, 정부조달 등 양국의 13개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의 13개 관심분야	
우리측 관심분야	인도측 관심분야
■ 무역 및 투자진흥	■ 섬유 및 가죽
■ 에너지	■ 제약
■ 정보통신기술	■ 관광
■ 과학기술	■ 보건의료
■ 중소기업	■ 재생에너지 자원
■ 인프라 및 수송	
■ 시청각 콘텐츠	
■ 정부조달	

14장. 분쟁해결

분쟁해결 부문은 총 16조의 협정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 발효 후 양국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하다. 어느 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남소를 방지하였다. (제14.3조).

양국은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 30일 이내 협의 개시하며(제14.4조), 협의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WTO 분쟁해결절차(협의 요청 후 60일) 보다 단축하여 협의 요청 후 45일 이내에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제14.6조) 이밖에도 양국은 중재패널 구성시 상대국이 분쟁해결 절차 지연을 위해 고의로 패널 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명된 위원을 유일한 중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4.7조) 중재패널 구성 등 양국이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분쟁해결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못한 경우■ 협정에 불합치 하지 않은 상대국의 어떠한 조치의 결과로 상품, 원산지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경우
분쟁해결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 TBT■ 경쟁■ 지적재산권■ 양자간 협력 등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에는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 패널의 운영 및 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행정 및 최종규정 부문은 총 8조의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인도 CEPA 협정의 이행과 감독, 개정과 발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5.2조), 양국의 합의하에 협정의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5.5조) 동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60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며 (제15.7조), 어느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결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6개월 후 협정이 종료된다. (제15.8조)

III. 한·인도 CEPA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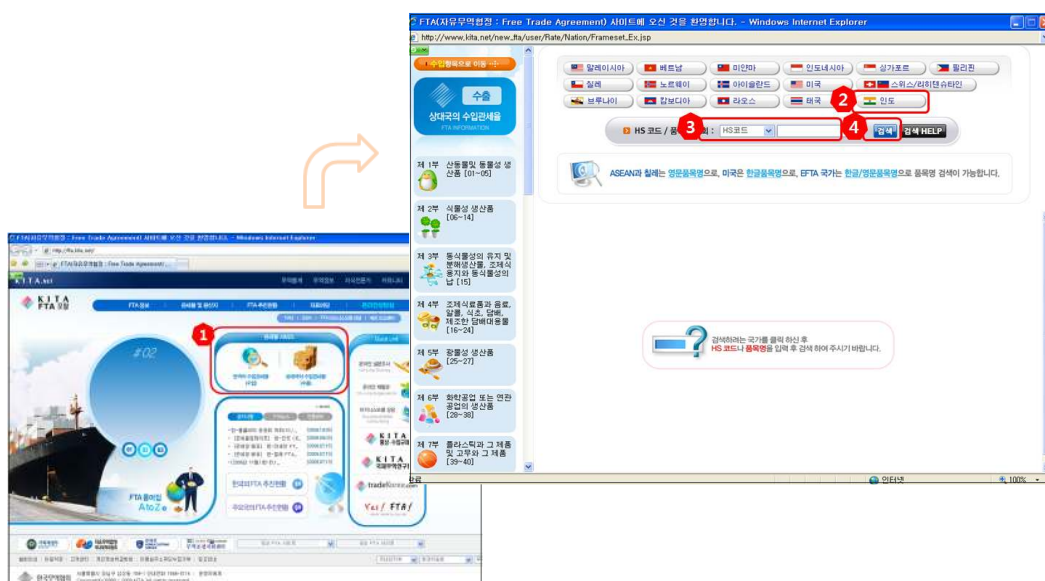
한·인도 양국 기업들이 한·인도 CEPA체결로 만들어진 양국 시장 진출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정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 및 원산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인도 CEPA는 물론 이미 타결된 한·칠레, 한·ASEAN FTA 등에서의 협정관세, 원산지 기준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한·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한·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http://fta.customs.go.kr>) 또는 무역협회(<http://fta.kita.net>) FTA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세율과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한·인도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사례이다.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절차

- ① 무역협회의 FTA 포털사이트에서 수출 또는 수입 관세율 중 알고자 하는 부문을 찾아 선택
- ② 국가목록에서 인도를 찾아 선택
- ③ HS코드/품목명 조회에서 해당 품목의 코드 또는 한글 내지 영어로 품목 명을 입력
- ④ 검색버튼을 누른 후 해당 품목의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예시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을 수출하고자 할 때 해당 상품의 CEPA협정세율과 원산지기준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1. 무역협회의 FTA포털사이트에서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의 HS코드 또는 품목명을 입력 하여 한·인도 CEPA에서 양허한 품목인지 확인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의 HS 코드 : 40119200)
2. 아래와 같이 해당상품의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정보를 확인

<인터넷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 방법>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www.kita.net/new_fta/user/Rate/Nation/Frameset_Ex.jsp

수출
상대국의 수입관세율
FTA INFORMATION

제 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01~05]
제 2부 식물성 생산물 [06~14]
제 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품 [16~24]
제 5부 광물성 생산물 [25~27]
제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물 [28~38]
제 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39~40]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

HS 코드 / 품목명 조회 : HS코드 검색 검색 HELP

ASEAN과 칠레는 영문품목명으로, 미국은 한글품목명으로, EFTA 국가는 한글/영문품목명으로 품목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인도 FTA
돌아가기 프린트하기 통합정보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출 Export (상대국의 수입관세율)
국가명	인도
HS Code	40119200
품목명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 및 기계용의 것

관세율 정보

관세인하 스케줄	일반품목군
기준세율	12.5
연간쿼터	-

원산지 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이상이고 HS 6단위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난 것.

주석1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의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 결과

■ 관세율

년도	발효1년	발효2년	발효3년	발효4년	발효5년	발효6년	발효7년	발효8년
관세율	10.9	9.4	7.8	6.2	4.7	3.1	1.6	0.0

■ 원산지 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이상이고 HS 6단위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난 것.

2. 원산지 증명

(1) 원재료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FTA체결로 인한 관세혜택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자사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종제품을 조립·생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공급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 한·인도 CEPA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제품을 인도로 수출할 때, 해당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시 : 중국에서 가죽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신발을 생산한 경우(2개국 이상에 걸친 생산 활동)

한·인도 CEPA협정서의 부속서 3-가를 살펴보면 가죽신발(HS6405)의 경우 1) HS 4단위에서의 세번변경과 2) 40%이상의 부가가치 발생 여부를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HS 품목분류표에 따르면 가죽갑피는 HS 6406에 해당되고 가죽신발은 HS 6405로써 4단위 세 번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 가죽갑피로 한국에서 생산한 신발은 세번변경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공식을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이면 이 업체가 제조한 신발은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어 인도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역내부가가치에 대한 설명 및 계산 방법은 3장 원산지 규정 부문 참고

위에서 언급된 원산지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는 칠레, EFTA 등 우리나라가 맺은 FTA에 대한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으며, 한·인도 CEPA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서비스 역시 조만간 제공될 예정이다. FTA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들어간 후 FTA대상 국가(인도 선택)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의 HS코드를 입력하면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는 역내부가가치 등의 계산을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료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원산지 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알려준다.

다음은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서비스의 예이다. 국가를 선택하고 HS6단위 코드를 입력 한 후 원산지기준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 질문이 나오고, 여기에 응답하면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 적합성 여부가 나타난다.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FTA포털' (FTA Portal)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Origin Confirmation). It feature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FTA대상국가' (FTA Target Country) set to '칠레' (Chile) and 'HS6단위' (HS 6-digit) set to '430180'.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with columns 'HS Code', '종목명(한글)' (Commodity Name in Korean), and '원산지기준' (Origin Criteria).

HS Code	종목명(한글)	원산지기준
430180	상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고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료를 제외한다) 5. 기타의 모피(견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고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1호 내지 제4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Below the table is a section titled '원산지기준 적합여부 관련질문' (Origin Criteria Compliance Related Questions) with three questions and checkboxes for '예' (Yes) or '아니오' (No):

1. 귀사의 수출물품은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2. 귀사의 수출물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다면 그 비원산지 재료는 수출물품과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재료입니까? ☐ 예 ☒ 아니오
3. 귀사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미소기준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사용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At the bottom, there is a button labeled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합니다.' (Meets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제품의 원산지 기준요건 충족을 확인한 수출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한 곳은 관세청 (<http://fta.custom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certweb>) 두 곳으로, 아직은 인도 외의 기체결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만 가능하지만 곧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신청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방법과 단계이다.

<인터넷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관세혜택 및 원산지 기준 확인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의 단계



3. FTA컨설팅 및 비즈니스모델

한·인도 CEPA 등 FTA체결 확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확대 기회를 갖지만 점차 복잡해지는 FTA규정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청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FTA활용 비즈니스모델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컨설팅 내용과 컨설팅 신청 방법이다.

관세청의 다양한 FTA활용 비즈니스모델(<http://fta.customs.go.kr>)

- | | |
|---------------|------------|
| ■ FTA관세혜택활용모델 | ■ 물류비절감모델 |
| ■ 원산지결정활용모델 | ■ 유관기관협력모델 |
| ■ 품목분류활용모델 | ■ 지역특화산업모델 |
| ■ 관세행정제도활용모델 | |
| ■ FTA허브모델 | |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확인 및 컨설팅신청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FTA portal website in Internet Explore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기업컨설팅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FTA Business Model Enterprise Consulting). It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service and a form to fill out.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기업컨설팅 신청서

관세청은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출 중대 등 기업의 수익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FTA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형 Business Model은 수출입업체와 관련이 있는 FTA별 원산지 기준,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혜택 및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 환경의 수출입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모델입니다.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기업컨설팅 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TEL	FAX	E-Mail	
주소	방문예정일		
컨설팅 세관 <input checked="" type="radio"/> 관세청 <input type="radio"/> 서울세관 <input type="radio"/> 인천세관 <input type="radio"/> 인천공항세관 <input type="radio"/> 부산세관 <input type="radio"/> 대구세관 <input type="radio"/> 광주세관			
관세사 참석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관세사명	
컨설팅 신청내용			

<부록 1>

한-인도CEPA의 주요 공산품 양허현황

인도 양허		한국 양허
양허유형	주요 품목	주요 품목
E-0 (즉시 철폐)	컴퓨터 주변기기(0), 유선전화기(0), 무선전화기(0), 축전기(0), 팩시밀리(0), 다이오드(0), 트랜지스터(0), 스위치부품(0~12.5),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0~12.5), 냉방기 부품(0~12.5), 무선 통신기기부품(0~12.5), 변성기(0~12.5), 비디오 카메라(0~12.5), 소프트웨어(0~12.5), 실리콘웨이퍼(0), 플러그와 소켓(0~12.5), 오디오테이프(0), 유선통신기기부품(0~12.5), 화학기계부품(0~12.5) 등	강반 빌레트(0), 건설중장비 및 부품(0), 기초유분(0~5, 벤젠, 부타디엔, 크실렌 등), 금속광물(1~6.5, 티타늄광, 크롬광 등), 고철(1), 나프타(1), 석유화학제품((3~8, 나프탈렌, 메탄올, 아세톤, 초산에틸 등), 플라스틱 제품(5~8, 폴리에스테르 등), 냉연강판(0, 스테인레스강), 도금강판(0), 동광(1), HDD(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석탄(1~5), 선철(2, 제강용, 주물용), 아연광(1), 아연도강판(0), 열연강판(0), 용접기(0~8), 우라늄(0~1), 원자로 및 전기로(0~8), 철광(1~2), 합금철(3~5, 페로크롬), 합성수지(6.5~8, 폴리카보네이트) 등
E-5 (5년 철폐)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12.5), 일부 냉연강판(5), 신문용지(12.5), 아연괴(7.5), 의약품 전자기기(12.5), 초음파 영상진단기(0), 칼라TV 모니터(12.5), TV 카메라(12.5), 합성고무(10~12.5, SBR), 합성수지(12.5, 폴리카보네이트) 등	견방사(8), 대리석(8), 데님(10~13), 양탄자(10), 소매용 의약품(6.5~8), 원유(5), 농약(6.5), 주철(8), 초음파 영상진단기(8), 폴리에스터사(8), PDP TV(8, 디지털), 화물자동차(10, 단 덤프차는 즉시), 편직물(10), 윤활유(7~8) 등
E-8 (8년 철폐)	강반제품(5~7.5), 건설중장비(0~12.5), 다이아몬드 공구(12.5), 고철(5), 과산화수소(12.5), 기초유분(부틸렌, 5~12.5), 일부 냉연강판(7.5), 일부 도금강판(5), 라디오(12.5), 베어링(12.5), 보온밥통(12.5), 선박(12.5), 선철(5), 시멘트(12.5), 원유(5), 영화영사기(12.5), 편직제 의류(12.5, 양복 등), 전기로(0~12.5), 카메라(12.5), 화장품(12.5) 등	모사(8), 비공업용 다이아몬드(5), 순모직물(13), 일반 외과용 의료기기(8), 페니실린(6.5~8), 엑스선관(8), 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시멘트(5~8), 동괴(5), 합금철(8, 페로실리코 망간) 등
RED (8년내 1~5%로 인하)	일부 자동차 부품(12.5), 카스테레오(12.5), 공기조절기 부품(12.5), 엔진결합발전기(12.5), 용접기부품(12.5), 석유화학중간원료 (5, 파라크실렌) 등	자동차 휘발유(5)
SEN* (8/10년내 50% 감축)	냉장고(12.5, 200리터 이하), 제트유(10), 살충제(12.5), 비디오튜너(12.5, 천연색), 자동차 기어박스(12.5), 일부 접착제(12.5) 등	혼방면사(8), 배전 및 제어기 부품 등(8)
EXC (양허제외)	에어컨(12.5), 벤젠(5), 페놀(12.5), 중고의류(12.5), 전기식 난방기구(12.5), 냉장고(12.5, 400리터 이상), 일부 냉연강판(5), 일부 순면직물 (12.5), 스포츠화(12.5), 전자레인지 (12.5), 승용차(100), TV 음극선관 (12.5), 폴리에스터사(12.5), ABS 수지(5) 등	경유(5), 등유(5), 병커유(5), 제트유(5), 일부 순면사(8) 등

주:* 인도는 10년 내, 한국은 8년 내 50% 감축

한·인도CEPA의 주요 농·축·수·임산물 양허현황

인도 양허		우리 양허
양허유형	주요 품목	주요 품목
E-0 (즉시 철폐)	모피(0, 여우, 밍크, 바다표범 등), 소가죽(0), 양가죽(0) 등	면(1), 모(1~3), 모피(3, 코요테 등), 박류(0~1.8, 대두유 등), 기타 가죽(2, 소, 양, 악어, 뱀, 장어류 등), 산호 공예품(8), 달팽이(20), 천연 섬유원료(2, 대마, 아마 등), 파래(20~45), 진주조개(20), 원목(1~2, 가문비, 낙엽송, 단풍나무, 오동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참나무 등), 종자류(0, 잔디, 참나무 등) 등
E-5 (5년 철폐)	원목(5, 침엽수, 참나무 등), 일부 섬유판(12.5) 등	밀(1.8, 종자용), 사탕수수(3), 생선 페이스트(20), 캐비아(20), 명란(10), 이쑤시개(8), 목재 식탁용품(8) 등
E-8 (8년 철폐)	건축용 목제품(12.5, 문, 창문, 판자 등), 목재류(5~12.5, 침엽수, 활엽수), 제재목(12.5), 건축용 석재(12.5), 파티클보드(12.5), 합판(12.5), 사암(5~12.5), 슬레이트(5), 화강암(12.5), 일부 섬유판(12.5) 등	덱스트린(8), 박류(5~8, 기타유박 등), 사료(4.2~18), 김(10, 냉동, 건조), 미역(20~45), 굴(20, 냉동), 명태(20~30), 참치(10, 냉동 참다랑어), 북어(20), 게살(20), 건축용 목제품(8, 문, 창문, 판자 등), 수목류(8, 호도나무 등) 등
RED (8년내 1~5%로 인하)	돼지고기(30), 쇠고기(30), 칠면조고기(30), 과일주스(30, 오렌지 제외), 발효유(30), 치즈(30), 간장(30), 시럽(30), 빙과류(30), 천연섬유원료(5~30, 대마, 아마 등), 고등어(30), 넙치(30), 건조수산물 (30, 대구 등), 참치(30), 새우(30), 굴(30), 게(30, 냉동, 조제저장처리), 오징어(30), 가리비(30), 홍합(30), 김(30), 어류통조림(30, 고등어, 멸치) 등	화강암(8, 평판상, 수평상), 밀(108.7, 종자용), 박하(8), 부자(8), 시가(40), 강황(8) 등
SEN* (8/10년내 50% 감축)	감(15~30), 강낭콩(30), 매니옥 전분(30), 보리(0~30), 녹차(100), 커피(100), 홍차(100), 닭고기(100, 절단육), 일부 박류(15~30), 딸기(30), 비스킷(30), 인삼(30), 감초(30) 등	사료용 옥수수(328), 인스턴트 커피(8), 시럽(8~20), 게맛살(20), 오징어 (10, 건조, 염장), 골뱅이(20), 건축용 석재(8), 수목류(8, 단풍나무, 소나무 등), 제재목(5), 향신료(8, 월계수잎 등) 등
EXC (양허제외)	쌀(70~80), 무(30), 감자(30), 견(15~30), 고구마(30), 고추(30~70), 오렌지 주스(30), 사과(30~50), 견과류(30~150), 아몬드, 위스키(150), 밀가루(30), 감자전분(30), 옥수수(50), 콩(30), 버섯류(30), 마늘(27~360), 맥주(100), 면(10~30), 설탕(60), 꿀(30~60), 우유(30), 버터(40), 옥수수유(100), 팜유(70), 담배(30), 수산물 통조림(30, 바다가재, 새우) 등	쌀(-), 감귤(144), 고추(27~270% or 6,210/kg), 마늘(30~360% or 1,800/kg), 양파(27~135% or 180/kg), 꿀(243% or 1,864/kg) 참깨(630% or 6,660/kg), 들깨(40% or 410won/kg), 과일주스(30~54), 녹차(513.6), 홍차(40), 밀가루(4.2~800.3), 설탕(50%), 전분(50.9~800.3), 옥수수(328~630), 우유(36), 분유(176), 쇠고기(18~72), 돼지고기(18~30), 닭고기(18~30), 달걀(41.6), 참치(10, 냉동 눈다랑어), 고등어(10~20), 목재류(8), 파티클보드(8), 참깨유박(630% 또는 6,660/kg), 일부 합판(12), 마루판(8~12) 등

주: * 인도는 10년 내, 한국은 8년 내 50% 감축

전문인력(Professionals) 목록

1. 컴퓨터 하드웨어1)설계기술자	1. Computer Hardware1) Design Engineers	25. VMS장비 개발자	25. VMS products developer
2.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개발자	2. Computer network products developer	26. RF통신연구 개발자	26. RF communication research developer
3. 기록장치 개발원	3. Recorder developer	27. 유선통신망 기획원	27. Wire communication network planner
4. 하드디스크 개발원	4. Hard disk developer	28.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28. Communication line Design Engineers
5. 컨트롤러 개발원	5. Controller developer	29.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29. Artificial satellite TV receiver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6. 컴퓨터 기기 기술자	6. Computer products Engineers	30.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30. Optical communication products Design developer
7.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7. Computer control system developer	31.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31. Letters service products operator
8. 디스크드라이브 개발원	8. Disk drive developer	32. 전송기 개발자	32. Transmission developer
9. 컴퓨터메인보드 개발원	9. Computer main board developer	33. 무선전화기 개발원	33. Wireless phone developer
10. 입·출력장치 개발원	10. Input/output products developer	34. 디지털수신기 개발자	34. Digital receiver developer
1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11. Telecommunication Machinery Engineers and Researchers	35. DMB폰 개발자	35. DMB phone developer
1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12. Telecommunication Equipment Engineers and Researchers	36. ADSL장비 개발자	36. ADSL products developer
1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13.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Engineers and Researchers	37. VMS 장비 운용원	37. VMS products operator
1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14.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Engineers and Researchers	38.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38.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Engineers
15. 핸드폰회로 개발원	15. Mobile circuit developer	39.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39. Internet network operation Engineers
16.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16. Modem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40. 통신공사 감리원	40. Communication construction manager
17.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17. Interphone or phone developer	41.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41. Wireless relay equipment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18. DMB수신기 개발자	18. DMB receiver developer	42.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42. Communication application service equipment developer
19. HFC망 운영 기술자	19. HFC network operating Engineers	43. CDMA기술연구 개발자	43. CDMA technology research developer
20. SMS장비 운용원	20. SMS products operator	44.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44. Wireless data network developer
21. 무선통신망 관리원	21.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manager	45.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45. Communication intelligent network research developer
22. 회선 관리원	22. Electrical circuit manager	46.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6. Network communication equipment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23. 교환기 개발자	23. Switchboard developer	47. 유무선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7. Communication equipment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24.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개발자	24. Fiber optic node-products developer		

48.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48. Switchboard development Design Engineers	7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73. Database Programmers
49.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49. Digital broadcasting equipment developer	7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74. Database Managers
50. 통신망 설계 기술자	50.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Engineers	7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75. Database professional
51. 정보통신 컨설턴트	51. IT Consultants	76. 네트워크 엔지니어	76. Network Engineers
5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52. Computer System Supervision Professionals	77.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77. Network system analysts
5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53. Computer System Designers and Analysts	78. 인트라넷 기술자	78. Intranet Engineers
54. 네트워크 컨설턴트	54. Network Consultants	79. LAN 기술자	79. LAN Engineers
55.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55. Database Consultants	80. VAN 기술자	80. VAN Engineers
56. 정보보안 컨설턴트	56.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s	81. WAN 기술자	81. WAN Engineers
57.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57. Information system Consultants	82.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82. Network server building operation Engineers
58.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58. System Software Designers and Analysts	83. 웹 마스터	83. Web Masters
59.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59. System Software Programmers	84. 웹엔지니어 및 웹 프로그래머	84. Web Engineers and Programmers
60. EMBEDDED 프로그램 개발자	60. EMBEDDED program developer	85. 정보 시스템 운영자	85. Information System Operators
61. 리눅스 개발자	61. Linux developer	86. 일반관리 컨설턴트2)	86. General management consultant2)
62. MICOM제어 기술자	62. MICOM control Engineers	87. 재무 관리 컨설턴트	87. Financial management consultant
63. 운영체제소프트웨어 개발자	63. OS developer	88.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88. Marketing management consultant
64. FIRMWARE 개발자	64. FIRMWARE developer	89. 인사 관리 컨설턴트3)	89.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nsultant3)
6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65. Application Software Designers and Analysts	90. 생산 관리 컨설턴트	90. Production management consultant
6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66. Network Programmers	91. 홍보 컨설턴트	91. Public relations consultant
67. 그 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7. Application Software Programmers n.e.c.	92. 송배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92.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Engineers and Researchers
68.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68. Data management application programmer	93.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93. Electrical Measurement and Control Engineers and Researchers
69.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69. Financing management application programmer	94.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94. Electrical Supervisors and Researchers
70.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70. Information process application programmer	95.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95. Cement Engineers and Researchers
71. 프로토콜 개발자	71. Protocol Developers	96.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96. Press mold Design Engineers
72.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72. Database Designers and Analysts	97.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97. Plastic Molding Design Engineers
		98.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98. Cast Mold Design Engineers
		99. 비행체 기술자	99. Aircraft Engineers
		100. 디젤기계 기술자	100. Diesel machine Engineers
		101. 가스터빈 기술자	101. Gas turbine Engineers
		102. 항공기기계 기술자	102. Aircraft machine Engineer
		103. 인공위성 기술자	103. Satellite Engineers

104.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104. Injection molding Design Engineers	128.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128. Automobile engine design Engineers
105. 환기장치 기술자	105. Ventilation equipment Engineers	129.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9. Petroleum and Chemical Engineers and Researchers
106. 환풍기계 공학 기술자	106. Ventilation machine Engineers	130.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130. Rubber and Plastic Engineers and Researchers
107. 냉동기계 기술자	107. Refrigerator Engineers	131.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31. Pesticide and Fertilizer Engineers and Researchers
108. 열 교환기 설계원	108. Heat exchanger designer	132.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32. Paint Products Engineers and Researchers
109.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109. Clean room air conditioning equipment Design Engineers	133. 화장품 및 비누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33. Cosmetics and Soap Engineers and Researchers
110. GHP 개발자	110. GHP developer	134. 천연가스화학 엔지니어	134. Natural gas Chemical Engineers
111. 열 교환기 개발자	111. Heat exchanger developer	135. 타이어생산 기술자	135. Tire production Engineers
112.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112. Air conditioning purgation Design Engineers	136. 가솔린 기술자	136. Gasoline Engineers
113. 토공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113. Public works construction machine design development Engineers	137. 천연 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137. Natural g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gineers
114. 도로포장용 기계설계개발 기술자	114. Pavement of a road construction machine design development Engineers	138. 양조생산 기술자	138. Brewage production Engineers
115. 운반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115. Transportation construction machine design development Engineers	139.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9. Metal Engineers and Researchers
116. 쇄석기, 천공기, 향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 기술자	116. Crusher, drillpile-drivers and pile-extractors design development Engineers	140. 전기제품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140. Electrical Products Development Engineers and Researchers
117. 농업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17. Farming machine(design) Engineers	141.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41. Power Plant Engineers and Researchers
118.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18. Mining machine(design) Engineers	142. 전자장비 기술자	142. Electronic equipment Engineers
119.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19. Fiber machine(design) Engineers	143.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3. Mold Making Engineers and Researchers
120.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20. Food machine(design) Engineers	144.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4. Plant Engineers and Researchers
121.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21. Machine tool (design) Engineers	145.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5. Cooling, He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nd Researchers
122.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122. Oil pressure machine(design) Engineers	146.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6. Construction Machine Engineers and Researchers
123.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123. Industrial robot design Engineers	147.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7. Industrial Machine Engineers and Researchers
124. 자동차 관련 특수엔지니어링 디자인서비스(자동차 설계사)	124. Special Engineering Design Service for automobile (automobile designer)	148.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8. Automobile Engineers and Researchers
125. 항공기 설계가	125. Aircraft designer		
126. 자동차기계 기술자	126. Automobile machine Engineers		
127.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127. Car electronics Engineers		

149.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0.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 조선 공학 기술자 152. 탐사 기술자 153. 석유 기술자 154. 시장 및 여론 조사 관리자 155. 조사 전문가 156. 생물학자4) 157. 생화학자4) 158. 건축 시공 기술자 159. 토목 시공 기술자 160. 광고 전문가 161. 게임 프로그래머 16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163. 초·중등학교 영어 원어민보조교사5)	149. Ship Engineers and Researchers 150. Aircraft and Railroad Vehicle Engineers and Researchers 151. Marine engineering Engineers 152. Exploration Engineers 153. Oil Engineers 154. Market and Public Opinion Survey Manager 155. Survey Specialists 156. Biologist4) 157. Biochemist4) 158. Construction Work Engineers 159. Civil Construction Engineers 160. Advertising Professionals 161. Computer Game Programmers 162. Game Graphic Designers 163. Assistant English Teacher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5)	 1) 컴퓨터 하드웨어에는 컴퓨터 칩, 회로기판, 컴퓨터 시스템 및 키보드, 모뎀, 프린터와 같은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한국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의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안의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인노무사의 직무에는 노사관계 및 급여계획에 관한 컨설팅을 포함한다. 4) 박사 학위 및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립·사립 및 공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사설교육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내 관련당국과의 협의를 마친 후에 더 구체적인 양허 조건이 확정될 것이다.	 1) Computer hardware includes computer chips, circuit boards, computer systems, and related equipment such as keyboards, modems, and printers 2) For greater certainty, consulting services on law is not included. 3) In the case of Korea, the consulting services included in the scope of duties of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s under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Act are not included. The duties if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s include consulting on labor –management relations and remuneration strategies. 4) Doctoral degree or equivalent os required. 5) For greater certainty, Public, Private and Private–Public schools are included. Teaching in private teaching institute is not included. More specific terms of the concession will be determined after internal consultations are concluded.
--	--	---	---

Original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				

1.수출자(이름, 주소, 국명, 전자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참조번호:		
2. 생산자(이름, 주소, 국가) (선택)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 및 증명서 겸용) 발행국_____ (국가)_____		
3. 수입자(이름, 주소, 국가) (선택)				
4. 운송수단 및 경로(선택) 출항일 : 선명/편명 : 적출항 :		5. 담당자란		
6. 비고				
7. HS번호 6단위	8. 상품명세(수량포함)	9. 총중량 및 가격(FOB)	10. 원산지기준	11. 송장번호 및 일자
12. 수출자 신고 아래 서명자는,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고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국가)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에 부 합하고 다음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_____(수입국) _____장소, 일자, 서명권자 서명		13.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_____장소, 일자, 서명 및 발급기관의 관인		
14. <input type="checkbox"/> 제 3국 송장(이름, 주소, 국가)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가. 수입당사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다.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특정공정 - 기타 	"CC / CTH / 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예: "RVC 35%" "CC / CTH / CTSH" 또는 RVC X%" "CC / CTH / CTSH" + "RVC X%" "SP" "Others"
(라)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